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1년 3월 18일

ISSN 1976-0507 Vol. 5 No. 9

인도의 2011년도 예산안 평가 및 시사점

송영철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최윤정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3460-1039)

■ 2011년 2월 28일 인도정부는 △인플레이션 타개 및 재정건전화, △고성장 지속, △포괄적성장(inclusive growth) 강화, △국정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인도경제의 최고 현안인 인플레이션 타개 및 재정건전화 도모를 위해 조세개편 및 보조금 감축, 공기업 매각, 충지출억제 정책을 추진함(2011년 총 지출은 전년대비 3.4% 증가, 2010년에는 18.7%).
- 투자환경 개선과 농업·인프라·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고성장 지속을 도모하는 한편 농촌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괄적 성장정책을 강화
- 국정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전자정부 실현, 부패척결, 정부부처 업적평가시스템 등을 도입

■ 이번 예산안에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물가 해소를 위한 농업부문의 구조적 대책과 재정적자 축소, 국정쇄신 대책과 함께 농업·인프라·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은 인도의 안정적 고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2011년도 경제성장률이 8.75%~9.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의 목표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라 향후 세계 최고의 고성장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인도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농업, 인프라, 보험업,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진출 기회 활용이 필요함.

- 중국이 향후 5년간 성장률을 7%로 하향조정한데 반해 인도는 9%의 고성장 지속을 상정하고 있어, 인도가 세계 최고속 성장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농업 부문에서의 냉동·냉장, 저장 및 물류센터 등과 인프라개발, 보험업, 소매업 등 진출 기회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에 우리기업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개 요

- 2011년 2월 28일 인도정부는 △인플레이션 타개 및 재정건전화 △고성장 지속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강화 △국정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11/12년¹⁾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약 12.6조 루피(약 2,700억 달러)로 전년대비 3.4% 증가에 그쳤으며, 이 중 중앙정부 계획지출규모는 약 6조 루피로 전년대비 18% 증가됨.²⁾

표 1. 2011년도 예산지출 주요 내용

구 분	2011년도 예산액 (천만루피)	2011년도의 전년대비 증가율	2010년도의 전년대비 증가율
총 지출(Total expenditure)	1,257,729	3.4%	18.7%
비계획지출(Non plan expenditure)	816,182	-0.7%	13.9%
계획지출(Plan expenditure)	441,547	11.8%	30.2%
중앙정부 계획지출(Central Plan Outlay)	592,457	18.0%	23.4%
농업	14,744	2.7%	30.4%
농촌개발 ¹⁾	55,288	-0.3%	17.0%
관개 및 홍수관리사업	565	36.8%	-2.4%
에너지	155,495	23.2%	10.4%
산업 및 광물(Industry and Mineral)	45,214	16.4%	26.6%
교통(Transport) ²⁾	116,861	18.4%	14.2%
통신	20,256	66.5%	-17.5%
과학기술 및 환경	16,186	27.9%	28.3%
일반경제서비스	15,802	6.2%	271.3%
사회서비스 ³⁾	144,816	13.9%	46.5%
일반서비스	7,230	425.1%	10.7%

주: 1) 농촌지역 주택건설 포함, 도로건설 미포함.

2) 농촌지역 도로건설 포함.

3) 농촌지역 주택건설 미포함.

자료: India Budget 2011/12.

- 인도정부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현 시점에서 인도경제의 가장 중대한 사안(key challenges)임을 강조하면서, 재정건전성 실현을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 보조금 및 사회서비스 예산을 감축하였으며, 공기업 매각을 지속 추진키로 함.
- 보조금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감축에 힘입어 예산의 총지출규모는 전년대비 3.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전체 수입은 3.6% 증가하는 등, 인도정부는 2011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GDP대비 4.6%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2010년도 -5.1%)

1) 2011년 4월~2012년 3월 회계연도를 의미함. 이하에서는 2011년도로 표시.

2) 예산안 총 지출규모는 계획지출과 비계획지출을 합한 금액이며, 중앙정부계획지출의 경우 계획지출 중 중앙정부 계획지출(Central plan)과 공기업(Public enterprise)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을 합친 것임. 계획지출(Plan expenditure)은 비계획지출에 포함되는 이자지불, 연금, 일반서비스, 사회서비스, 국방비, 주정부 지원금, 공무원 월급 등 고정지출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되찾은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농업, 인프라, 제조업 부문 발전 등을 추진함.
- 포괄적 성장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농촌개발 및 일자리보장,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확대 실시하며, 식량안보법안 상정을 추진함.
- 또한 국정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전국민 전자주민증 발급, 전자정부 실현, 부패척결, 정부부처 업적평가시스템 등을 도입함.

2. 부문별 대책의 주요 내용

가. 인플레이션 타개 및 재정건전화

■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건전화

- 직접세에서 개인소득세 면제를 확대하고 법인세 추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법인세 최저세율과 물품세의 과세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적 균형을 유지
- GDP에서 17.6%를 차지하는 소득세입의 감소(-0.4%)를 법인세 및 물품세 수입으로 보완함으로써, GDP 대비 총세입(gross tax collection)은 지난해 10%에서 10.4%로 증가할 전망

표 2. 조세제도 개편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직접세	- 개인소득세 면제 범위를 기존 16만 루피에서 18만 루피 이하로 확대 - 노인에 대한 면세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완화, 또한 과세 소득기준을 기존 24만 루피에서 25만 루피로 수정 -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소득세 면제 범위를 50만 루피로 확대 - 인도 국내기업에 대한 추가세율(surcharge rate)을 7.5%에서 5%로 인하 - 최저세율인 MAT(minimum alternative tax)*는 18%에서 18.5%로 인상 - SEZ입주 기업 또는 개발자에 대해 MAT 적용
간접세	- 면세 대상이었던 130개 품목에 대한 1%의 물품세(excise duty) 부과 - 중앙물품세율(central excise duty)을 기존 4%에서 5%로 인상 - 서비스세 과세 범위 확대 ○ 보험, 호텔, 건강검진, 법률 서비스 등

주: * 최저세율은 기업 혹은 개인사업자가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조치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줄어들더라도 최소한 반드시 내야하는 세율임.

자료: India Budget 2011/12.

■ 보조금 및 사회서비스 부문 예산 감축

- 식량과 연료 등에 대한 보조금을 전년대비 12.5% 감소한 1조 4,000억 루피로 책정하고 극빈층을 타겟으로 지급하는 한편³⁾,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도 1조 달러로 지난해 대비 15.3% 감축함.
- 보조금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감축에 힘입어 인도정부는 2011년도 재정 적자규모를 GDP대비 4.6%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예산의 총지출규모는 전년대비 3.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전체 수입은 3.6% 증가

표 3. 예산안 수입/지출 요약

(단위: 십억 루피)

구분	2010/11	2011/12	증가율(%)
총수입	8,156	8,449	3.6
총지출	12,166	12,577	3.4
재정적자	-4,010	-4,125	2.9
재정적자/GDP	-5.1%	-4.6%	-

자료: India Budget 2011/12.

■ 공기업 매각 추진

- 2011년도 공기업 매각규모를 전년대비(실제매각금액 대비) 약 76% 증가한 4,000억 루피로 계획함.
- 2010년도 공기업 매각 계획규모도 4,000억 루피였으나 실제 매각 금액은 2,275억 루피에 그친 바 있음.

표 4. 공기업 지분매각 추이

(단위: 억 루피)

구분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계획)
지분매각 금액	158	54	3,880	257	2,596	2,275	4,000

주: 2011년도를 제외한 이전 회계연도의 지분매각 금액은 실제 매각된 금액임.

자료: India Budget 2011/12.

나. 고성장 지속

■ 외국인투자 개방 및 환경개선

- 인도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인도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투자

3) 인도정부는 연료,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을 극빈층에게(below poverty) 직접지급(direct cash transfers)하는 신(新)보조금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밝힘.

자의 범위를 확대함.⁴⁾

- 기존에는 등록된 외국인 기관투자자(FII)들이나 해외거주 인도인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허용했음.
- FII의 인도회사채 투자한도도 기존 2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확대하였음.
- 인도 재무부 장관은 예산안 발표 시 보험법(Insurance Laws Bill) 수정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할 것임을 밝힘.
- 또한 중앙은행이 새로운 은행라이선스(banking license)⁵⁾ 가이드라인 및 규제안을 준비 중에 있음을 언급, 2011년 3월 말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은 민영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 5. 투자개방 및 환경개선정책

구분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 개방	-외국인투자자들의 뮤추얼펀드 투자 허용 -FII의 인도회사채 투자한도를 기존 2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확대
관련법안 수정	-은행법, 보험법, 연금법안 수정 추진 -인도회사법(Company Bill) 국회상정 추진

자료: India Budget 2011/12.

■ 농업부문 투자 및 지원 확대

- 인도정부는 최근 식품물가상승의 요인이 글로벌 상품가격 인상 외에도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식,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금번 예산안에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
- 특히 농업생산 확대를 위해 농업단지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에 중점을 둬.

4) 단 개인투자자는 인도에서 계좌생성 및 거래감독, 불법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고객알기제도(KYC: know your customer)라는 가이드라인을 충족시켜야 함.

5) 인도는 민간 및 비은행금융회사(non-banking finance companies)에 대한 은행업 진출을 지난 8년간 금지해왔으며, 실제로 1993년 이후 새로운 인도민간은행의 설립은 전무하였음. 현재 인도에는 총 96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이중 27개가 국영은행, 31개가 민영은행, 38개가 외국은행이지만 전체 은행산업에서 국영기업의 비중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밖에 민영은행이 18.5%, 외국은행이 6.5%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농업부문 투자확대정책

구분	주요 내용
농업생산 확대지원	- 채소클러스터, 곡물생산, 콩빌리지(pulses vilages), 오일팜(oil palm) 지대 개발에 각각 30억 루피 지원 - 목축업 및 어업 개발에 30억 루피 지원
금융지원	- 농업부문 대출규모를 기존 약 3조 7,000억 루피에서 4조 7,000억 루피로 확대 - 농업종사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 지원 폭을 기존 2%에서 3%로 확대 - 농업부문 대출확대를 위해 NABARD(National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 자금지원 확대
농업기술개발(R&D)	- 유기농업기술 개발 및 현대적 기술도입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농업인프라 확대	- 10개의 대형 푸드파크(food park) 추가 개발 - 저장시설 및 냉동·냉장시설 개발 확대

자료: India Budget 2011/12.

■ 인프라부문 투자확대

- 인프라부문 개발 예산을 전년대비 23.3% 확대하였으며, 대규모 자금 확보를 위해 비과세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FII의 인프라채권 투자한도를 확대함.
- 비과세채권은 인도철도금융공사 및 NHAI(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HUDCO(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총 3,000억 루피 규모로 발행될 계획임.

표 7. 인프라부문 투자확대정책

구분	주요 내용
인프라개발 예산 확대	- 인프라개발에 전년대비 23.3% 상승한 약 2조 1,000억 루피(약 45억 달러) 배정
자금조달 확대	- 인프라개발 사업을 위해 3,000억 루피 규모의 정부 비과세채권 발행 허용 - FII의 인프라회사채권(corporate bond for infrastructure) 투자한도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확대 - 특수목적법인(SPVs)의 인프라채권에 대한 원천세를 기존 20%에서 5%로 감세
인프라정책	- 인프라개발 종합정책(comprehensive policy) 마련을 통한 PPP사업 확대 모색

자료: India Budget 2011/12.

■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 고성장 지속과 청년인구 취업을 위하여 10년내 제조업의 비중을 현재 GDP의 16%에서 25%로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조업정책(National Manufacturing Policy)을 마련

- UN산업개발기구(UNIDO)는 2011년 산업통계연감에서 인도가 세계 10대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나, 1인당 생산성은 중국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 조달정책의 투명성 증진, 천연자원 가격책정 및 활용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
- 특히 2010년 30%에 가까운 성장을 보인 자동차업계에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도입 확대를 추진

다. 포괄적 성장

■ 식량안보법안(National Food Security Bill) 추진

- 인도정부는 그동안 보류되어 왔던 식량안보법안을 올해 내로 국회에 상정할 것임을 발표함.
- The National Advisory Council(NAC)에 의해 제안된 동 법안은 2013년도까지 전체 인구의 75%가 식량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보조금 대상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가중 문제 및 대규모 식량조달의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보류되어 왔음.

■ 농촌개발 및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확대

- 지역·계층 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농민층을 대상으로 한 농촌개발 사업 및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확대, 개선함.
- 농촌근대화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대비 1,000억 루피가 증가한 5,800억 루피가 배정되었으며, 농촌고용보장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 규모는 변화가 없으나 최소 임금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에 연동시키는 탄력적인 임금시스템을 도입함.

표 8. 농촌개발 대책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농촌 근대화 (Bharat Nirman)	- 주택, 도로, 전기, 통신, 식수, 관개 등 6개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농촌지역 근대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약 5,800억 루피의 예산 배정(전년도 약 4,800억 루피)
농촌고용보장 대책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 약 4,000억 루피의 예산 배정(전년도 약 4,000억 루피) - 임금을 CPI와 연동하여 임금 탄력성을 강화 ○ 지난해 일당 100루피에 고정되어 있던 최소 임금을 CPI와 연동시켜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변동을 가능하게 함.

자료: India Budget 2011/12.

■ 취약계층 지원(교육 및 보건·복지 부문)

- 학교교육 및 건강, 복지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표 9. 취약계층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아동개발서비스	- 세계은행과 함께 아동개발 지원에 약 1,000억 루피를 배정 ○ 이 중 세계은행의 지원 비중은 약 33억 루피
여성 및 장애인 취업 지원	- 소외지역 소규모사업체(micro enterprises) 설립에 약 300억 루피 배정, 여성취업을 보장 ○ 여성 및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은 각각 40%, 3%임.
보건지원	- 소외지역의 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해 약 1,700억 루피 배정
주택건설 지원	- 빈곤층의 주택건설 지원을 위해 1,000억 루피 배정

자료: India Budget 2011/12.

라. 국정관리체계 개선

■ 전국민 전자주민증 발급

- 2011년 10월부터 매일 100만개의 전자주민증(UID: Unique Identification Numbers)을 발급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의 책임성과 투명성 증진을 도모

- UID는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여 현재까지 200만개가 발급

■ 전자정부 실현

- 효율적인 조세행정과 납세자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직접세중앙위원회(CBDT: Central Boards of Direct Taxes)와 간접세중앙위원회(CBEC: Central Boards of Excise and Customs) 주도하에 IT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을 실시

표 10. IT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세행정 자동화	- 세금의 전자고지 및 지불 - GST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상업세 자동화시스템 구축 - 웹에 기반한 납세자 환급 및 선지급 세금에 대한 크레딧 추적
전자지불 시스템	- Indian Stamp Act 1899 수정법안 도입을 비롯, 중앙 및 주정부 차원의 인지(stamp) 현대화 작업에 30억 루피 배정 - 추정과세로 인한 소규모 납세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단순화한 양식(Sugam) 도입

자료: India Budget 2011/12.

■ 부패척결을 위한 조치와 정부부처 업적평가시스템 도입

- 선거, 공무원의 각종 부패사건, 정부조달 및 계약의 투명성, 중앙부처 자유재량권 감독, 천연자원의 경쟁적 착취 등을 관리하는 각료급 특별위원회 발족
- 지난해 영연방게임(Commonwealth Games), 3세대이동통신주파수 매각 등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발각된 고위급 정부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민심과 해외투자 이탈로 이어지자,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는 예산안에서 특별히 부패척결 의지를 천명
- 총 62개 정부부처의 업적을 평가하는 업적감독 및 평가시스템(Performanc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을 도입하여 정부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

3. 평가 및 시사점

가. 예산안 평가 및 전망

■ 금번 예산안에서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부각됨.

- 고성장 유지와 재정건전성 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 기존 정책 기조에다 최근 야기된 고물가 타개책으로서 농업부문의 구조적 대책과 외국인투자 여건 개선정책 등이 추가됨.
- 금년 4월 타밀나두로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로서는 물가안정을 통한 민심 수습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예상보다 낮은 GDP대비 4.6%의 재정적자 목표를 발표하고 정부 채신대책을 발표한 것은 시장에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번 예산안에서는 이례적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부정부패 척결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

■ 농업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재정적자 완화 조치 등은 장기적으로 인도의 안정적 고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최근 대두된 인도의 식품인플레이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도의 고성장을 위협하는 고(高)물가는 농식료품의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면이 적지 않음.

- 또한 그동안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었던 식량, 연료,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 감축은 재정적자를 완화하여 안정적 고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계경제 위기로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었던 2008년도와 2009년도 인도의 중앙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각각 GDP대비 -6.0%, -6.4%까지 확대된 바 있음.
- 하지만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세수입 증가예상분이 GDP 대비 0.4%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조금 감축과 공기업 매각만으로는 재정건전성 달성 여부가 불확실함.
- 식량과 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12.5% 감축 조치가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에 의문
- 식량 보조금의 경우 식량안보법이 조속히 시행된다면 보조금 부담이 오히려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연료 보조금도 최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보조금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민영화 역시 주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추진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음.

표 11. 부문별 예산안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 농업부문 투자 확대 ■ 인프라부문 투자 확대 ■ 법인세 추가세율 인하 ■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 교육부문 예산 확대 ■ 일반 물품세율 유지(general excise duty) ■ 외국인 투자자의 뮤추얼펀드 투자허용	■ MAT 세율 인상 ■ 서비스세 인상(항공 서비스 등) ■ 소매유통업 개방 미실시 ■ 재정건전성전성 실현 불확실(보조금 부문) ■ 민영화 추진 지연

자료: *Economic Times, Coty group, ICIC Budget review, Deloitte, J.P.Morgan* 등의 의견을 종합, 분류하였음.

- 인도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11년도 경제성장률이 8.75~9.2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동 예산안이 대체로 중립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인도 경제를 받치고 있는 소비와 투자의 견조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개인 소득세 감면 및 법인세의 부분적인 완화조치는 소비 및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갖지만, 최저세율(MAT), 물품세 및 서비스세의 인상은 효과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몬순, 국제유가는 예측이 어려운 변수로, 중동발 유가폭등 및 일본발 지진영향 등이 가시화될 경우 물가의 추가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성장 둔화도 불가피함.
- 또한 인도의 인프라프로젝트 559개 중 293개인 약 52%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010년도 Economic survey), 농업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의 실현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나. 시사점

■ 인도정부의 농업 및 인프라부문 투자확대 정책을 우리기업 및 민관합동의 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의 경우 냉동·냉장, 신선 및 특수 창고, 물류센터 등 농업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부문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임.
- 특히 최근 식품인플레이션 문제로 인도의 식품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그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인상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우리기업은 단독 또는 정부와 연계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⁶⁾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정부가 그동안 인프라사업 지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토지수용문제, 미숙한 행정절차,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 부재 등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진출환경 역시 차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⁷⁾

■ 보험부문 개방 등에 따른 진출 기회 확대

- 보험법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한도가 현 26%에서 4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기업도 인도 보험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6) PPP는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자들간에 지켜야 할 의무의 분장과 리스크 부담 등을 최적의 방식(optimal way)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은 세수입을 통한 투자금액 조성, 보유 자산의 이전, 파트너십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타의 지원 (in-kind support)를 포함하며, 민간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통하여 PPP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금액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7) 이번 예산안에 PPP 중심의 인프라개발 관련 종합정책(comprehensive policy)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어, 기존 인프라개발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산층 증가와 사회기반시설 확대에 따른 보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인도 보험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410억 달러로 최근 몇 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약 4%에 불과함.
- 보험법 외에도 4월 FDI 규제완화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5월 이후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부문과 소매·유통업 부문 추가 개방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 향후 세계 최고의 고성장 국가로서 인도의 행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중국은 향후 5년간 7%로 성장률을 하향상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인도 정부는 약 9%의 고성장 지속을 상정하고 있어, 향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로 대두될 가능성에 주목
 - 지난 2월 CITI 보고서는 인도가 2050년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언급 